

동아시아의 복지 격차: 가족과 국가를 둘러싼 비교사회학적 고찰

카미무라 야스히로 (kamimura@lit.nagoya-u.ac.jp)

1. 시작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노인복지를 비교사회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좌표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한일 공통의 정책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근거리 비교를 시도해 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겠으나, 본고에서는 오히려 먼 시공간으로까지 사회학적 상상력의 날개를 넓혀 보고자 한다. 다음의 2 절, 3 절에서는 복지국가의 국제 비교에서 시공간적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4 절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의를 재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5 절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다.

2. 국제적 관점의 회복¹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는 H. 윌렌스키(Wilensky 1975)에 의해 개척되었으나, 지난 몇 년간의 융성은 G.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공헌에 의한 부분이 크다. 선진 복지국가를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한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은 잘 알려져 있다. 우선, 개인이나 가족의 자조노력을 중시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레짐(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 다음으로 직업 범위별 사회보험이 발달하고, 종래의 형태인 가족케어를 전제로 하는 보수주의 레짐(독일 등 주로 대륙쪽 유럽 국가들). 마지막으로 고복지 고부담으로 계급간, 남녀간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사민주의 레짐(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복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고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핑-안데르센의 논의에는 불만스러운 점도 있다. 그의 연구대상은 상대적으로 균질적인 선진 복지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국제 비교라고는 해도 각국의 국내요인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역사도 경제도 다양한 동아시아 각국으로 대상을 넓힌다면, 복지국가 형성에 작용하는 국내요인과 더불어, 복지국가 존립의 성패를 결정하는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의 차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에스핑-안데르센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K. 폴라니의 국제적 관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폴라니(Polanyi 1944)는 사회보호 없는 노동시장이 인간파괴를 초래한다고 하는 명제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를 수용하여, 복지국가의

¹ 본절과 다음 절은 카미무라(上村 2015)의 서장에 기초하고 있음.

핵심은 ‘노동의 탈상품화’에 있다고 생각했다. 즉, 노동자가 필요에 따라 일을 중단하더라도 시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역할이고, 복지국가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인간파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스핑-안데르센의 견해에서는 어떤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탈상품화를 수행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정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에스핑-안데르센과 달리, 폴라니는 각국의 사회문제를 국제 정치경제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국내 정치와 국제 경제의 대립이다. 폴라니의 『대전환』에서 그려진 19세기 국제 경제는 금본위제도(金本位制)가 지배하고 있어, 불황 때 정부가 재정출동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활을 지킬 수가 없었다. 금본위제도 하에서는 불황 시에 긴축재정에 의해 통화 안정을 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 경제의 요구와, 권리에 눈을 뜬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국내 정치의 요구와의 모순, 그것이 점차 커졌을 때 제 1, 2차 세계대전의 파국이 있었다는 것이 폴라니의 견해이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가 존립가능하게 된 것은 『대전환』 간행과 같은 해, 브레튼우즈회의에서 성립된 새로운 국제 경제 체제에 따른 부분이 크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국제 경제와 국내 정치의 요구를 양립시키고자 했다. 국내 정치의 필요에 부응하여 사회정책이나 산업정책을 행할 여지를 각국 정부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시되었고, 무역의 자유화는 그것이 가능한 범위에 제한되었다. 말하자면 ‘절도 있는 글로벌화’의 실현이 목표로 여겨졌던 것이다(Rodrik 2011: 70, 일본어역 2013: 92). 그 결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양방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민에게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선진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나라들을 시작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를 국가 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보냈다. 권위주의 체제의 정부는 국민의 권리요구를 억압하거나(배제적 코포라티즘), 일부 단체의 권리만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거나(포섭적 코포라티즘) 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책보다도 산업정책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같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도 권위주의 체제를 취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 다른 정책이 선택되어, 선진 복지국가와는 다른 타입의 복지국가가 형성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고, 노동시장에 있어 인간파괴 방지에 충분한 만큼의 사회보호 기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3. 역사적 관점의 확장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공적인 사회보호의 정비가 선진 복지국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F. 엥겔스(Engels 1845)가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그려낸 것과 같은 인간파괴가 전면화되지는 않았다. 어째서일까? 물론 동아시아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한 실업이 낮게 유지됐기 때문이라거나,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복지의 공급에 있어 친족 집단의 역할이 컸다는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는가? 역사적 관점을 넓혀 보면 이와 관련하여 서구와 동아시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해서는 역사사회학자 P. 고르스키와 S. 칼이 종교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고르스키에 따르면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출현이 천주교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이는 에스핑-안데르센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출현한 것은 개혁파 개신교의 영향이 컸던 영국과 그 이후 식민지들뿐이었으며, 사회주의 복지국가가 출현한 것은 북유럽의 동질적인 루터파 국가들뿐이었다는 것이다(Gorski 2003: 163).

게다가 칼에 따르면, 현대 복지국가의 여러 유형의 배경에는 기독교 종파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역사적인 구빈제도의 차이가 있었다(Kahl 2005: 92). 천주교에서는 수도원이 빈민구제를 담당해 왔던 것에 비해, 루터파 여러 도시는 구빈제도를 세속화했다(같은 책: 92). 한편, 구빈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발명한 것은 개혁파 개신교의 사회개혁자들이었다(같은 책: 108). 이처럼 다른 구빈제도가 복지국가의 기초에 있으며, 사회보험도 기존의 구빈제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 칼의 견해이다(같은 책: 93).

그들의 이론에 입각하면 서구의 복지국가 성립의 원인(遠因)에는 종교개혁이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 특히 루터파나 개혁파의 국가들에서는 수도원의 해체를 겪고 세속 정부가 빈민구제의 일을 맡았던 것이다. 즉, 종교개혁 이전에는 복지가 교회의 일이었으며, 구빈법은 그것을 세속화하고, 합리화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빈민구제가 공공 사업이 되었던 점이, 본디 동아시아와는 크게 다르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는 이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공적 빈민구제 체계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0 세기 가량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왜 유럽에서는 복지가 교회의 일이 되었는가?

사회인류학자 J. 구디에 의하면, 유럽에서 친족 집단이 축소된 것은 6 세기 교회가 근친혼, 친척과 과부와의 결혼, 입양, 내연, 이혼 등을 금지한 결과이다(Goody 1983: 39). 이것은 성서의 교리에 근거한 금지가 아니라, 친족 집단에 의한 재산 상속의 가능성을 저하시켜 교회에 기부를 유도할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같은 책: 95). 이에 따라 친족 집단은 축소되고, 친족 집단의 재산은 교회로 이전되었으며, 그에 대한 교환으로 빈곤층·고아·과부에 대한 보호가 교회의 책임이 된 것이다(같은 책: 46).

F. 후쿠야마는 구디의 견지에 기초하여 친족 집단의 축소가말로 유럽에서 사유 재산권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를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하지만 (Fukuyama 2011: 239,

일본어역 2013: 상권 346), 본고의 관심에서 보자면 복지에 있어 친족 집단과 교회의 역할 분담의 변화 쪽이 더 중요하다. 이 시기에 성립한 기본형태가 종교개혁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 후 복지에 대한 가족과 국가의 역할 분담으로 계승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834 년에 구빈법이 개정되어, 원외(院外) 구제 폐지와 열등처우 원칙에 따라 수급자를 최소한으로 좁히려 하였으나, 1840 년에 이르어서도 수급자는 약 120 만 명(전체 인구의 7.7%)에 달했다(安保 2005: 44). 한편, 일본에서는 메이지 7 년(1874 년)에 옛 번(藩)의 구빈제도를 이어받아 구휼규칙이 제정되었지만, 수급자는 최다년(1892 년)의 경우에도 전국 18,545 명(총인구의 0.06%)에 불과했다(大霞會編 1971: 347). 양국의 수급율은 친족 집단 내지 가족과 국가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서구와 동아시아의 역사적 차이를 날카롭게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공적 사회보호를 충분히 정비하지 않은 채, 낮은 실업과 가족복지에 힘 입어 경제발전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1997~98 년 아시아 경제위기는 그 결함을 폭로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 역시 있어, 이미 핵가족화, 고령화, 피용자화 등의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사람들의 권리 의식도 각성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90 년대 이후 ‘지나친 세계화’ (Rodrik 2011: xvii, 일본어역 2013: 15) -구체적으로는 단기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 사상 초유의 높은 실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가족복지만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초래한 불안정과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복지 수준과의 충돌을 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져, 동아시아에서의 복지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4. 복지국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²

지금까지 복지국가라는 말을 정의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개념적인 구조물이자, 정의하지 않으면 무너져 사라져 버린다. 같은 말이라도 정의에 따라 다른 내용을 의미할 수 있으며, 현실적 대응물 속의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본고에서는 사회과학의 전통에 기초하여, 시장경제(내지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와 관련지어 복지국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때 선진 복지국가의 이론적 핵심에 대하여 고찰한 에스핑-안데르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도 적용가능한 이론구축을 목표로, 복지국가의 개념을 기존의 논의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의 핵심을 ‘노동의 탈상품화’ 라고 표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회권(權)의 확장은 항상 사회 정책의 본질로 여겨져 왔다. 칼 폴라니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들은

² 본절은 Kamimura(2016)에 기초하고 있음.

사회권을 ‘탈상품화’ 능력의 지점부터 검토해 보고 싶다’ (Esping-Andersen 1990: 3). 그러나 폴라니가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구분한 다음, 양자의 대립을 분석했던 것(Polanyi 1944: 140, 244)을 고려하면 탈상품화(경제 시스템에 대응)와 사회권(정치 시스템에 대응)을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왜 이러한 이론적 혼동에 빠졌던 것일까?

에스핑-안데르센에 따르면 ‘탈상품화는 어떤 서비스가 권리로서 주어지는 경우에, 그리고 어떤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Esping-Andersen 1990: 21). 그러나 탈상품화가 폴라니가 말한 사회보호와 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권리로서 부여되는’ 지 아닌지를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폴라니의 이론의 요점을 확인해 두자. ‘노동, 토지, 화폐 시장이 시장경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라도 그 구성요소인 인간이나 자연, 기업조직이 시장 시스템이란 악마의 멧돌의 맹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한, 조잡한 허구에 불과한 시장 시스템의 영향에 한 순간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Polanyi 1944: 76). 그러므로 노동을 자유시장의 맹위에서 지키는 탈상품화(사회보호)가 요청되는 것이며, 그것이 사회권에 기초하여 행해질지, 자력(資力)조사에 따른 구빈제도에 의해 행해질지는, 목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 지표를 정의할 때도 자력조사를 전제로 한 구빈제도를 일부러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Esping-Andersen 1990: 22, 54), 이는 폴라니의 사회보호 개념에 유래하는 판단이 아닌, 보편주의를 받드는 사회정책학의 전통(Titmuss 1974 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탈상품화와 사회권의 혼동은 사회권을 둘러싼 이론적 불명료함과도 연결된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와 나란히 하는 계층화를 ‘복지국가의 중요 부분’ (Esping-Andersen 1990: 3)이라고 위치 지었다. ‘복지국가는 불평등한 구조에 개입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시정하는 체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계층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다’ (같은 책: 23). 즉, 복지국가는 국민 각층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다름으로써 불평등을 표면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 것이다.

불평등의 문제는 T. H. 마셜이 초점을 맞췄던 시민권(특히 사회권)과 관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서술한 마셜이라면, 사회권을 실현하는 복지국가를 계층화가 아니라 평등화(즉 탈계층화) 능력의 지점에서 평가했을 것이다. ‘시민권은 공동체의 정식 성원에게 주어지는 신분이다.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시민권에 수반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평등이다.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결정하는 보편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으나, 시민권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시민권의 이미지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성취도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렇게 구상된 방침에 따라 한층 더 완전한 평등, 시민권 내용의 증축, 적용 범위의 확대가 추진된다’ (Marshall 1950: 18). 에스핑-안데르센은 북유럽의 보편주의를 표준으로 삼았던 탓에 북유럽 이외의 복지국가의 계층화 효과에 놀라게 되었지만, 사회권의

확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탈계층화에 주목하는 편이 직접적이다.

이렇게 보면, 에스핑-안데르센의 이론적 혼동 내지 불명료함은 북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특권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바이어스였다고 생각된다. 동아시아에도 적용가능한 형태로 복지국가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탈상품화와 탈계층화를 구별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탈상품화는 민주주의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유노동시장의 성립과 함께 요구된다. 그것은 권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한정시킬 수 없으며, 구빈법이나 가족복지도 탈상품화를 담당할 수 있다. 한편, 탈계층화는 특정 정치공동체의 민주주의와 결합된 개념으로,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요청된다. 탈계층화는 탈상품화를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바꾸는 것과 더불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탈상품화와 탈계층화의 양면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서 복지국가를 파악하고 싶다.

복지국가를 위와 같이 개념화하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서구 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이념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동아시아의 복지를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

		국제환경	
		제2차 세계대전 후	1980년대 이후
탈상품화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유산		브레튼우즈 체제 (절도 있는 글로벌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지나친 글로벌화)
서구 선진국	공적 빈민구제의 전통 (6세기부터)	① 민주주의에서의 계급간 연합의 차이 →탈계층화의 「3 가지 세계」	①' (b) 사회투자국가(의 「3 가지 세계」) (c)
동아시아 각국	친족복지 뿐	② 민주주의 없는 자유노동시장 →가족복지+국가 코포라티즘	②' (d) 민주화 × 코포라티즘의 유산 →약화되는 가족복지+억제적인 탈계층화

출처) 필자 작성.

제 2 차 세계대전 후 서구 선진국(그림 가운데①)에서는 에스핑-안데르센이 말하는 ‘복지자본주의의 3 가지 세계’ (Esping-Andersen 1990)가 출현했다. 이는 그가 상정한 것과 달리, 탈상품화가 아닌 탈계층화의 3 가지 타입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구빈법에 의한 탈상품화에 대한 뒷받침은 이미 역사적 유산으로서 존재했다. 그 기초 위에, 브레튼우즈 체제의 안정적인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탈계층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사회보장의 확충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탈계층화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는 에스핑-안데르센이 논한 대로, 의회의 계급간 연합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었던 서구 선진국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시기에 민주적인 의회정치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핑-안데르센의 틀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시기 동아시아 나라들(그림 중 ②)에서는 민주주의 없는 자유노동시장을, 가족복지에 의한 탈상층화가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는 공적 빈민구제의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적 의회정치의 미성립은 복지를 둘러싼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코포라티즘’(Schmitter 1979)이라고 불리는 정치구조가 생기기 쉽다. P. 슈미터에 따르면, 국가 코포라티즘은 ‘중속적인 후발 자본주의의 발전과 계급관계에서의 헤게모니 부재’(Schmitter 1979, 일본어역 1984: 52)에 대응하여 생겨난다. 거기에서는 국가의 엘리트가 안팎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최소한의 자원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배제한다(같은 책: 52). 게다가 일단 배제된 노동자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 의해 설계되고 관리된 단체에 재통합하려고 한다(Stepan 1978: 79). 그러한 정치구조 하에서는 체제에 포섭된 일부의 사람들만이 사회보장의 제공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같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도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서구 선진국에서 생겨난 것과 같은 탈계급화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예로부터의 가족복지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원형은 이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 배제와 포섭을 거쳐 형성되었다. 그것은 민주화(그림 중 ②')를 거쳐도 여전히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 복지국가(그림 중 ①)와 같은 모델에 수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조건과 국제적 기준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단 국가 코포라티즘이 강고히 제도화된 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탈계급화가 급속하게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 코포라티즘의 유산(그림 중 a)이라는 제약조건과 함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나친 글로벌화에 의해 각국 정부의 사회정책 자유도가 제한되게 되었다(그림 중 b). 또한 서구 선진국(그림 중 ①')에서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사회정책의 이념이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변화했지만, 선진국에서 주류가 된 이념이나 담론은 복지국가가 개발도상에 있는 동아시아에도 전파된다(그림 중 c). 셋째, 공적 빈민구제의 전통이 부족하고, 탈계층화도 억제적으로밖에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가족복지의 쇠퇴(그림 중 d)가 진행된다면 복지 수급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5. 복지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³

동아시아 각국의 복지 공급 현황은 국가복지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다. 기업이나 가족도 복지 공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윌렌스키와 에스핑-안데르센 등 이 분야의 개척자들이 일본의 복지 공급에서의 기업과 가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윌렌스키 1984: 10, 에스핀 - 안데르센 2001: iv). 그러나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기업이나 가족이 복지국가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다음에서는 가족에 의한 복지국가의 대체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한국·미국의 지난 30년 간의 변화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경향이 발견된다. 표 1을 보면 1981년 단계에서 노후 생활비에 대해 가족이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가 한국에서 50%, 일본에서도 20%를 점했던 것(미국에서는 0에 가까웠다)에 비해, 2010년에는 3 나라 모두 한 자리 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미국에서는 약간 늘었다). 한편,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생각은 3 나라 모두에서 40% 정도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가족복지 이데올로기가 강했던 한국이나 일본도, 오늘날에는 의식 면에서 미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표 2를 보면, 의식과 실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로부터의 원조’로 대표되는 가족복지에는 1981년 일본에서 30%, 한국에서 80%의 고령자가 의존하고 있었다. 그것이 2010년이 되면 일본에서는 몇 %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50%나 남아 있다. 이 결과는 공적 연금 성숙도의 함수이자, 가족복지 이데올로기의 강약을 꺼내들지 않아도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가족규범에 대해서는 선진국형으로의 수렴이 보여지나, 사회보장의 불충분을 가족복지가 대체하는 경향이 동아시아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한국		미국	
	1981년	2010년	1981년	2010년	1981년	2010년
스스로 준비	55.0	47.8	40.3	49.7	60.7	42.4
가족이 보살핌	18.8	7.2	49.4	6.6	0.6	7.1
사회보장으로	21.8	42.9	8.2	43.1	29.1	43.8
기타	2.5	1.5	1.1	0.4	6.0	5.6

데이터 출처) 내각부『제7회 고령자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결과』(2010년)에서 필자 작성.
대상은 60세 이상의 남녀. 각국 모두 1000샘플 정도이나, 추출법은 나라마다 다름.

	일본		한국		미국	
	1981년	2010년	1981년	2010년	1981년	2010년
일에 의한 수입	41.0	34.9	21.8	43.3	27.3	29.1
공적인 연금	64.6	85.9	1.7	30.3	82.1	77.5
사적인 연금	8.4	10.1	na	8.5	27.1	34.0
예금·저금에서의 출금	11.4	17.2	3.5	21.9	22.0	37.5
재산으로부터의 수입	15.6	6.8	5.5	7.9	45.1	26.1
자녀로부터의 원조	29.8	7.4	78.2	52.6	2.4	5.3
생활보호	1.7	0.9	2.0	8.7	3.3	3.5
기타	4.8	2.7	3.6	1.7	8.2	1.4

데이터 출처) 표1과 동일.

³ 본절은 카미무라(上村 2015)의 제 3 장에 기초하고 있음.

가족복지에 대한 의존은, 규범으로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급속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의식의 근대화 내지 서구화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로서 사회보장의 정비를 수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가족복지의 쇠퇴가 억제적인 탈계층화와 결합할 때, 복지 수급 격차에서 고령자의 빈곤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장경섭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복지국가가 ‘제도화된 개인화’ (U. 벡)를 촉진시킨 데에 반해, 한국에서는 ‘압축된 근대’ 하에서 가족중심적인 생활이 영위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의 제도적 쇠퇴는 극단적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張 2013: 43). 압축된 근대화가 복지국가의 뒷받침 없는 개인화를 초래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인 추세도 장(張)의 논의와 서로 잘 반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安保則夫, 2005, 『イギリス労働者の貧困と救済—救貧法と工場法』明石書店.
- ウィレンスキー、ハロルド, 1984, 「日本語版への序文」(下平好博訳)『福祉国家と平等—公共支出の構造的・イデオロギーの起源』木鐸社.
- エスピン-アンデルセン、イエスタ, 2001, 「日本語版への序文」(岡沢憲美訳)『福祉資本主義の三つの世界—比較福祉国家の理論と動態』ミネルヴァ書房.
- 上村泰裕, 2015, 『福祉のアジア—国際比較から政策構想へ』名古屋大学出版会.
- 大霞会編, 1971, 『内務省史・第三巻』地方財務協会.
- 張慶燮(柴田悠訳), 2013, 「個人主義なき個人化—「圧縮された近代」と東アジアの曖昧な家族危機」落合恵美子編『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アジア近代からの問い』京都大学学術出版会.
- Engels, Friedrich, 1845,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Nach eigener Anschauung und authentischen Quellen* (一條和生・杉山忠平訳『イギリスにおける労働者階級の状態—19世紀のロンドンとマンチェスター』岩波文庫、1990年).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岡沢憲美・宮本太郎監訳『福祉資本主義の三つの世界—比較福祉国家の理論と動態』ミネルヴァ書房、2001年).
- Fukuyama, Francis, 2011,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Farrar, Straus and Giroux (会田弘継訳『政治の起源—人類以前からフランス革命まで』講談社、2013年).
- Goody, Jack, 1983, *The Development of the Family and Marriage i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rski, Philip S., 2003, *The Disciplinary Revolution: Calvinism and the Rise of the State in Early Modern Europ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hl, Sigrun, 2005, “The Religious Roots of Modern Poverty Policy: Catholic, Lutheran, and Reformed Protestant Traditions Compared,”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Vol.46, No.1.
- Kamimura, Yasuhiro, 2016, “Reconceptualizing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Framework for 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y Association, Hitotsubashi University.
- Marshall, Thomas Humphrey, 1950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Press (岩崎信彦・中村健吾訳『シティズンシップと社会的階級——近現代を総括するマニフェスト』法律文化社、1993年) .
- Polanyi, Karl, 1944 (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野口建彦・栖原学訳『大転換——市場社会の形成と崩壊』東洋経済新報社、2009年) .
- Rodrik, Dani, 2011,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W.W. Norton (柴山桂太・大川良文訳『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パラドクス——世界経済の未来を決める三つの道』白水社、2013年) .
- Schmitter, Philippe C., 1979,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in Philippe C. Schmitter and Gerhard Le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Sage publications (山口定監訳『現代コーポラティズム I —— 団体統合主義の政治とその理論』木鐸社、1984年) .
- Stepan, Alfred, 1978, *The State and Society: Peru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itmuss, Richard M., 1974,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Allen and Unwin (三友雅夫監訳『社会福祉政策』恒星社厚生閣、1981年) .
- Wilensky, Harold L.,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下平好博訳『福祉国家と平等——公共支出の構造的・イデオロギー的起源』木鐸社、1984年) .